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296-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교권 침해 및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여론조사

2024. 09. 04.

담당자 신성현 본부장/교육학 박사

전화 | 02-3014-0087

e-mail | shinsh@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교권 침해 및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여론조사

여론 속의
여輿論論

주요 결과

- 지난 7월 18일은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교사 사망 이후 사회적 공분과 함께 교권 침해 및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육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은 교권 침해 및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7월 26~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및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 전체 응답자의 78%는 우리나라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 교권 침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응답자의 절반이 학부모의 내 자녀 중심주의(50%)를 꼽은 가운데, 교권을 침해하는 주체로 학부모(71%) 응답이 가장 높았다.
- 학교에서 교사의 교권은 보호받고 있지 않다(73%)는 응답이 보호받고 있다(22%)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이와는 상반되게,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은 보호받고 있다(69%)는 응답이 보호받고 있지 않다(26%) 대비 3배 가까이 높았다.
-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교권 침해가 교사의 교직 불만(76%), 학생의 학습권 침해(72%), 학생 대상 소극적인 생활지도(77%), 우수 인재의 교직 지원 감소(72%)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 정부 및 교육청에서 준비 및 실행 중인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들 중 교육활동 침해 입은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76%) 및 심리·의료 지원(74%)과 같은 교사 보호와 관련된 대책과 정당한 이유없이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 금지(70%) 및 교육활동 방해 학생의 교실 분리 지도(70%)와 같은 교사 권한 보장과 관련된 대책의 효과에 긍정 인식이 높았다.
- 학교 차원에서 중요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으로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32%)가, 교육 생태계 측면에서 교육활동 보호 대책으로 교권침해 대응 및 제재 강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및 제도 보완(31%)이 1순위로 꼽혔다. 학교 차원에서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대응, 교육 생태계 측면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접근의 효과성을 높게 인식함을 읽을 수 있다.

1

교권 침해 심각성 및 원인

교권 침해 심각하다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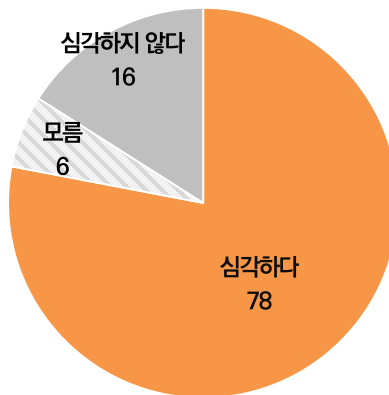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부모의 내 자녀 중심주의 50%

교권 침해 주체는 학부모 71%, 학생 14%

전체 응답자의 78%는 우리나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의 교권 침해를 심각하게 인식한다.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응답자의 절반은 학부모의 내 자녀 중심주의(50%)를 답하였으며, 이어서 학생들에 대한 기본소양 및 인성교육 미흡(14%),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미비(10%), 학생 인권의 강조 및 강화(10%) 순이다(1순위 응답 기준).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학부모가 우선으로 꼽히고 있는데,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주체로 학부모 등 학생의 보호자(71%) 응답이 가장 높은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교권 침해, 심각하다 78%

(단위: %)



질문: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심각하다(매우+대체로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별로+전혀 심각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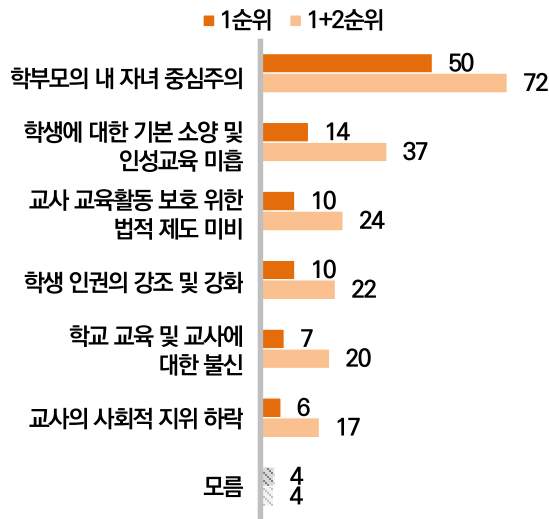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26. ~ 7. 2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교권 침해 원인, 학부모의 내 자녀 중심주의 5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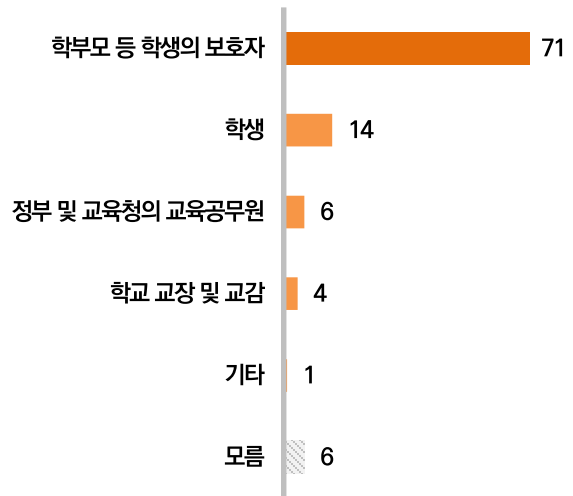
질문: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26. ~ 7. 29.

교권 침해 주체, 학부모 등 학생의 보호자 71%

(단위 : %)



질문: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를 누가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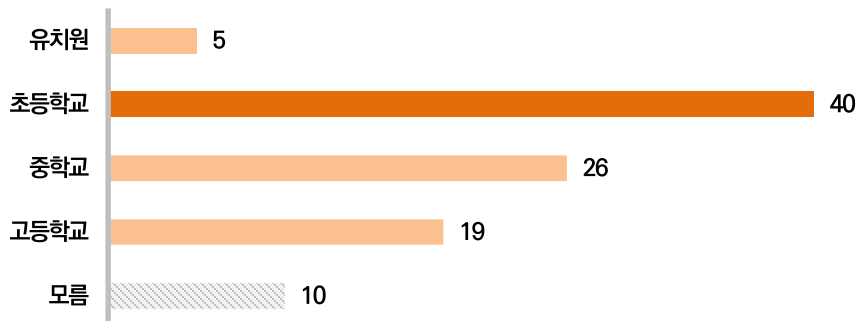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4. 7. 26. ~ 7. 2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copinion.co.kr)

교권 침해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학교급으로는 초등학교(40%), 중학교(26%), 고등학교(19%) 순이다. 초등학교가 다른 학교급 대비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개입이 많은 시기로, 학부모와 교사와의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잦은 시기로 인식되는 점과 초등학교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가 사회 이슈화된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교권 침해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학교급, 초등학교 40%

(단위 : %)



질문: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26. ~ 7. 2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 교사의 교권: 보호받음(22%) < ‘보호받지 못함(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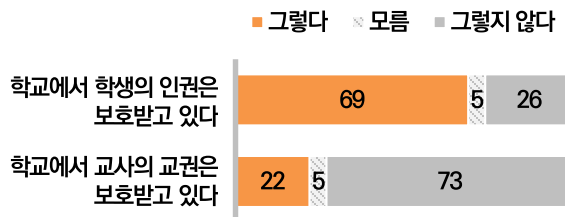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받음(69%)’ > 보호받지 못함(26%)

학교에서 교사의 교권은 보호받고 있지 않다(73%)는 응답이 보호받고 있다(22%) 대비 3배 이상 높을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다. 이와는 상반되게,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은 보호받고 있다(69%)는 응답이 보호받고 있지 않다(26%) 대비 3배 가까이 높다.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사의 교권 보호에 대한 응답이 반대의 양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호받고 있는 만큼 교사의 교권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 인식을 읽을 수 있다.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의 관계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 교권이 약화된다는(60%)는 응답이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강조되더라도 교권은 약화되지 않는다(30%) 대비 2배 높다.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 교사 교권은 약화 되는, 학생 인권과 교권 간의 반비례 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학교에서 학생 인권은 보호받고 있다 69%,
학교에서 교사 교권은 보호받고 있다 22%**

(단위: %)



질문: 현재 우리나라 학교와 관련하여 다음의 의견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그렇다(매우+대체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별로+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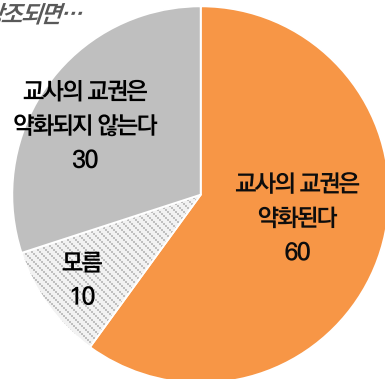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26. ~ 7. 29.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강조되면
교사의 교권은 약화, 60%**

(단위: %)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강조되면...



질문: 학생 인권과 교사 교권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26. ~ 7. 2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교권 침해의 영향

교권 침해는 교사의 교직 불안, 학생 대상 학업 및 생활지도 부실화, 우수 인재 교직 지원 감소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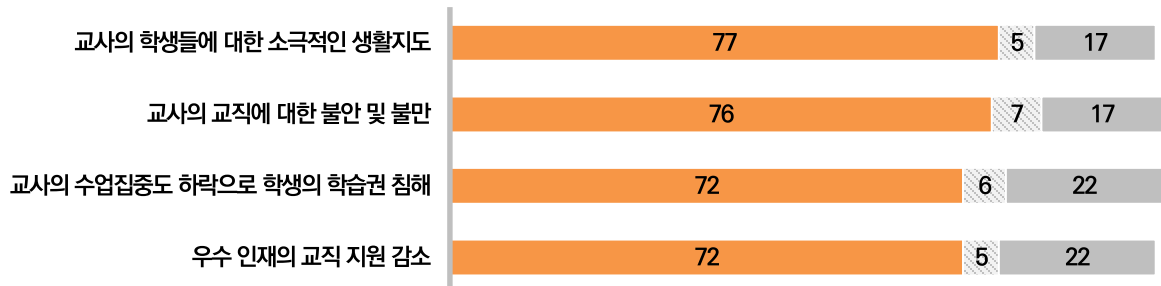
교권 침해가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소극적인 생활지도(77%), 교사의 교직에 대한 불안 및 불만(76%), 교사의 수업집중도 하락으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72%), 우수 인재의 교직 지원 감소(72%)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모두 70%를 넘어선다. 교권 침해가 교사의 교직에 대한 불안 및 불만이라는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 대한 학업 및 생활지도의 부실화,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우수 인재의 교직 지원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읽을 수 있다.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 교권 침해가
교직 불안, 학생 학습권 침해, 소극적 생활지도, 인재의 교직 지원 감소에 영향 미친다고 인식

(단위 : %)

교권 침해가 ...에

■ 영향을 미친다 ✕ 모름 ■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질문: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가 미치는 결과 및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 영향을 미친다(매우+대체로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별로+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26. ~ 7.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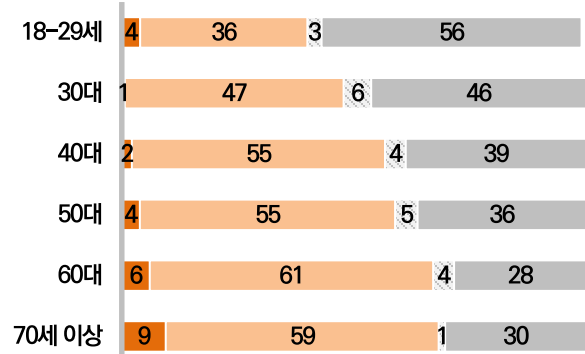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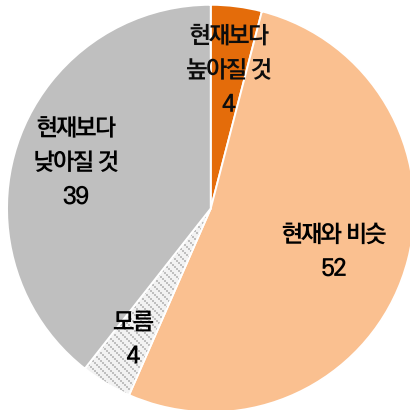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한편, 앞으로 교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4%이며, 현재와 비슷하다는 인식은 52%,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39%이다. 특히, 교직을 전공하고 교직에 입문할 세대인 18-29세 응답자의 절반 이상(56%)이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질 것이라 답한 결과는 우수 인재의 교직 유입 관련하여 고민할 지점이다.

앞으로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단위 : %)

현재보다 높아질 것 4%, 현재와 비슷 52%, 현재보다 낮아질 것 39%



질문: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26. ~ 7. 2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4 교육활동 보호 대책

교육활동 보호 대책으로 교권 침해 입은 교사 대상의 법률 및 심리·의료 지원과 교사의 권한 보장 관련 대책의 효과성 높게 인식

정부 및 교육청에서 현재 준비 및 실행 중인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들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질문한 결과, 교권 침해 입은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76%)과 심리 및 의료지원(74%), 정당한 이유 없이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 금지(70%),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로부터 분리 지도(70%) 방안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70% 이상이다. 이어서 학교 내 민원대응팀 및 민원면담실 운영(69%), 교사의 침해 신고와 함께 상담·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교권 침해 직통번호 운영(69%), 학부모 및 외부인 학교출입 관리 강화(67%), 교육활동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조치(63%),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의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61%)이 60% 이상이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58%)도 절반 이상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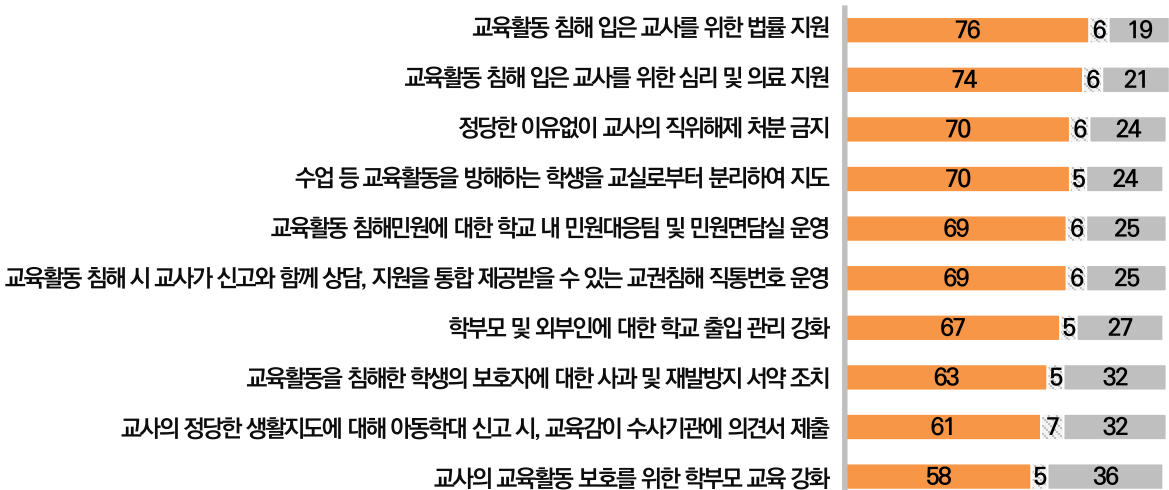
현재 준비 및 실행 중인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들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 응답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다. 특히, 교권 침해 입은 교사를 위한 법률, 심리·의료 지원과 같은 교사 대상의 보호 대책과 직위해제 금지 및 문제 학생 교실 분리 등 교사의 권한 보장 관련 대책의 효과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를 위한 법률, 심리 및 의료 지원과 정당한 이유 없이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 금지, 문제 학생 교실 분리 지도 순으로 대책의 효과성 높게 인식

(단위 : %)

...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 효과가 있을 것 ◊ 모름 ■ 효과가 없을 것



질문: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각의 방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비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매우+대체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별로+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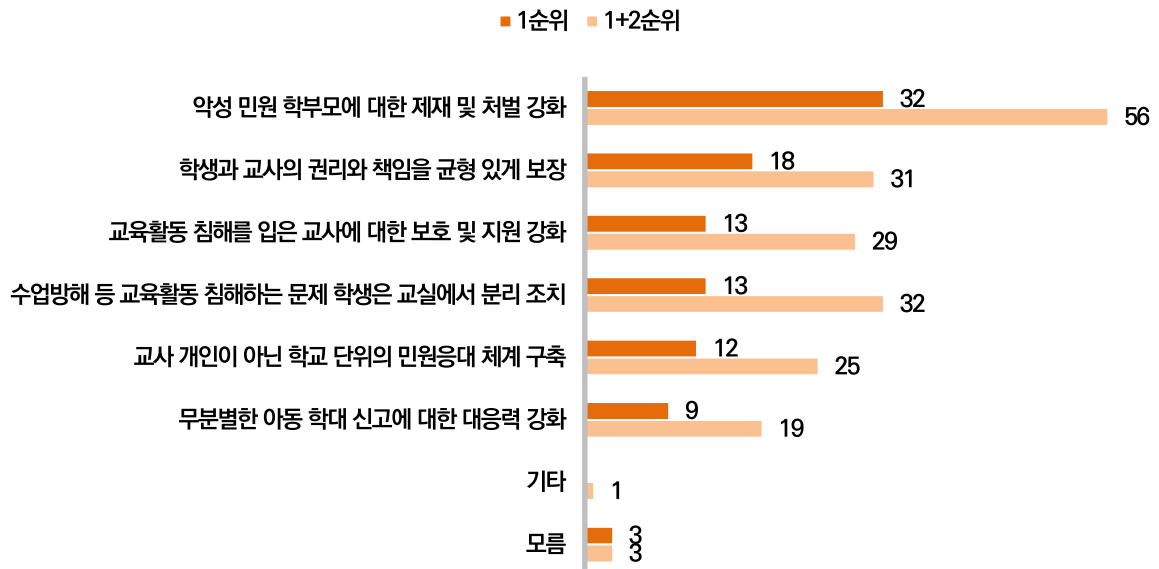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4. 7. 26. ~ 7. 29.

‘학교 차원’에서 중요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으로 ‘악성 민원 학부모 제재 및 처벌 강화’ 1순위 ‘교육 생태계’ 측면에서 교육활동 보호 대책으로 ‘교육활동 보호 법제화 및 제도 보완’이 1순위

학교 차원에서 중요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으로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32%) 응답이 가장 높고, 이어서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 보장(18%), 교권 침해 입은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13%),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하는 문제 학생에 대한 교실 분리 조치(13%),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단위의 민원 응대 체계 구축(12%) 순이다. 학교 차원에서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대응 및 제재 강화를 1순위로 꼽는데, 교권 침해의 주체로 학부모 응답이,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학부모의 내 자녀 중심주의가 가장 높은 점과 연관됨을 읽을 수 있다.

학교 차원에서 중요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 32%

(단위 : %)



질문: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다음 중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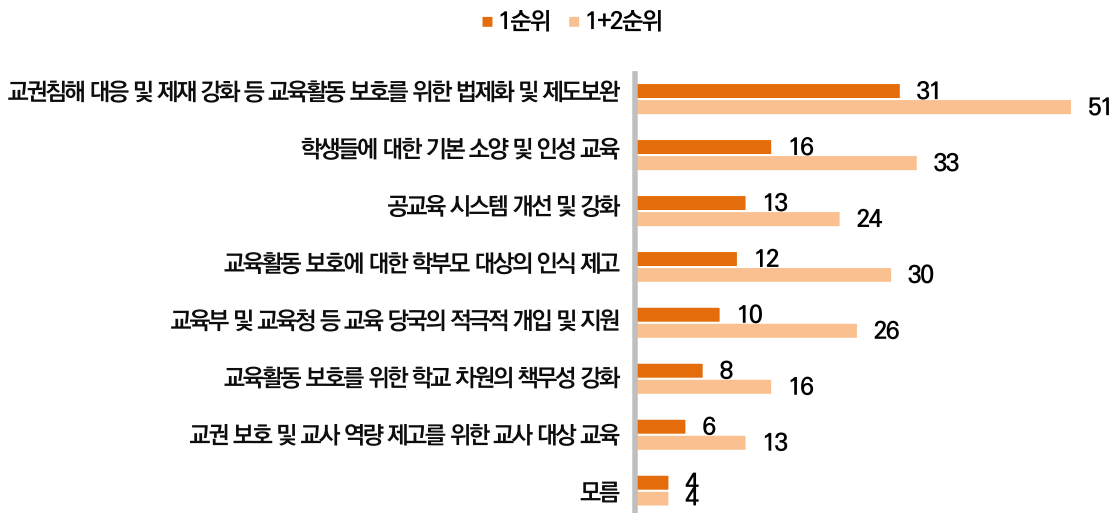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4. 7. 26. ~ 7. 2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copinion.co.kr)

교육 생태계 측면에서 효과적인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으로 교권 침해 대응 및 제재 강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및 제도 보완(3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생들에 대한 기본 소양 및 인성교육(16%), 공교육 시스템 개선 및 강화(13%),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제고(12%), 교육 당국의 적극적 개입 및 지원(10%), 학교 차원의 책무성 강화(8%) 순이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부모 및 학생 대상의 교육 및 인식 제고보다는 교사의 권한 보장 및 보호 등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법·제도적 접근의 효과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

효과성 높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 방향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및 제도 보완 31%

(단위 : %)



질문: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방향으로 무엇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26. ~ 7. 2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속의 여론(hrcopinion.co.kr)

이번 조사 결과는 현재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만큼 교사의 교권이 보호받고 있지 않음과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여준다. 또한 교권 침해가 교사 개인만이 아닌, 학교 및 사회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보여주고 있다.

교사는 교육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심 요인 중 하나로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장될 때 공교육이 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 이에 현재 교권 보호를 위해 준비 및 실행 중인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실질적인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보완, 학부모와 학생의 인식 제고, 교육당국 및 학교의 책무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4년 6월 기준 전국 93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22,371명, 조사참여 1,411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4.5%, 참여대비 70.9%)
조사일시	• 2024년 7월 26일 ~ 7월 29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